

5-2-1

교권침해 대응 강화, 법률지원 · 교원보호공제 확대



사업구분	세부과제	사업종류	사업주체	담당부서	담당자	내선번호
임기 내(○) 임기 후()	법률지원 확대	지속(〇) 신규()	국 가() 교육청(○)	교원인사과	최민주	438
임기 내(〇) 임기 후()	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	지속(〇) 신규()	국 가() 교육청(○)	교원인사과	최민주	438

정책목표

- 교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
-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상호 존중 문화 확산

2

현황

- 법률지원단 운영 현황
 - 구성: 법률지원담당 주무관 2명, 변호사 1명, 외부법률지원단 55명
 - 역할
 -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 대응 방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
 - 악성 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
 -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·고발 관련 검찰·경찰 조사 및 민·형사 소송 대응 지원
 - 그 외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지원 필요 사항
- 교원보호공제 지원 현황('25. 4. 1.자 약관 개정으로 보장 확대)

내용	지원금액		
법률 상담	1건당 20만원(사안별 10회까지 지원)		
민 · 형사 소송	1건당 소송가 330만원(소송물가액에 따른 최대 660만원까지 가능)		
법률대리인 선임	변호사 선임 최대 50만원(교권보호위원회 및 참고인·증인)		
심리 상담 및 조언	1건당 150만원 범위내 15회 지원		
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비	1건당 최대 200만원		
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비	연간 최대 50만원 및 소진교원 치료비 연간 100만원 지원		

※ 교원보호공제 지원 금액(초과 금액 교원 개인 부담)



③ 추진내용

- 교권침해 대응 강화
 - 교육활동 침해 초기대응 및 지원 강화를 위한 One-Stop 지원단 운영

악성민원	법률지원	맞춤형 지원	현장 컨설팅	심리 치유 상담	치료비, 치유비 지원
862-1122(7)	862-1122(6)	862-1122(6)	862-1122(7)	862-1122(5)	862-1122(8,9)

-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현장 컨설팅(유선, 대면) 실시
- 악성민원 대응 및 교육청 차원 법적 대응(형사고발 및 소송) 지원
- 법률지원 확대
 -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을 통한 즉각적인 현장 지원
 -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법률 특강 확대 실시('24년 2회 → '25년 4회)
 - 교원법률지원단 외부 위촉 변호사 확대('24년 51명 → '25년 60명)
 - 교육지원청별 외부 변호인단 신설 지원 및 법률 지원비 신설 편성(5,000천원)
-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
 -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시에도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('24년 교보위 개최시에만 치료비 1건당 200만원, 심리상담비 150만원 지원)
 - 법원 참고인 및 대리 출석시 법률대리인 선임비 건당 50만원 지원
 -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비용 물품당 100만원 한도 지원

4

연차별 추진목표

○ 연도별 확인지표(목표)

UHTITI	연도별 확인	최종확인지표	
세부과제	2025년	2026년 상반기	(정책목표)
법률지원 확대	지원청별 5,000천원	지원청별 6,000천원	지원청별 6,000천원
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	_	보장항목 2건 추가	보장항목 2건 추가



○ 분기별 확인지표(목표)

		-17-1010-				
세부과제	2025년		2026년		최종확인목표 (정책목표)	
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	2/4분기	(0774)	
법률지원 확대	지원청별 5,000천원	_	지원청별 6,000천원	-	지원청별 6,000천원	
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	-	-	보장항목 2건 추가	-	보장항목 2건 추가	

⑤ 연도별 예산투자계획

○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세부과제		2025년	2026년	합계
법률지원 확대	자체	25,000	30,000	55,000
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 자체		324,000	324,000	648,000
 합계		349,000	354,000	703,000

기대효과

- 체계적인 교육활동 보호 체계 마련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
-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 확산 및 교육활동 신뢰 제고